당리당략에 발목 잡힌 '교육자치법'

여야 선거방식 조율 실패 개정안 처리 무산

교육감 예비등록 시작… 선거일정 큰 차질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서 절충안으로 올해는 주민 직선으로 교육의원을 뽑되 내년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위원 일몰제' 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를 다시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민주당은 교과위 법안소위의 합의사항을 뒤집는 당론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무위원회 발언에서 "논의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교육위원 직선제를 포기할 수 없다"며 "여당이 떼를 쓰고 있는 형국"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의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교육감 선거는 우선 현행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인사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반면, 교육경력 및 당적 보유 기간 완화를 기대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인사들은 국회 의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선거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후보 등록이 늦춰지는 등 형평성 문제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경력 및 당적 보유 제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 망이 우세하다.

교육의원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오는 19일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여유가 있다.

그러나 선거 방식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교과위 법안심소사위에서 합의한 대로 교육의원을 정당이 추천해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자는 반면 민주당은 '주민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의원 정수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일 여야는 물밑협상을 통해 교육의원 직선제를 유지하되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고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절충안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올해는 주민 직선제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위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위원 일몰제' 도입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어 출마예정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의 물밑 협상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내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간의 냉각기와 물밑 협상기간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 처리는 내주께 가닥이 잡힐 전망"이라며 "다만, 여론의 눈총이 따갑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극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朴-MJ '세종시 수정안' 또 정면충돌

지난달 설전 이어 두번째 … 與與 공방 본격화

한나라당 정몽준(MJ) 대표와 박근혜 전대표가 2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하면서 여권의 세종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 대표가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수정 반대 입장을 우회 비판하고, 이에 박 전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두 사람간 충돌은 지난달 18일 세종시 당론변경 문제를 놓고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 받은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우호적 여론형성 및 당론변경을 위해 조직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이고, 이에 친박(친박근혜)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한나라당이 점점 실질적 분열국면을 향해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는 원안이 좋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아닐 것'이라는 정 대표 발언에 대해 "너무 기가 막히고 엉뚱한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혼잣말로 "말도 안되는.."이라며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친이계 세종시 토론회에 참석, "박근혜 전 대표는 원안이 좋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일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대화, 토론하면 해결책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당론 수렴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정 대표를 정면 공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박 전 대표를 거듭 우회 비판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사 5층 대강당에서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 광주·전남 국정보고대회'에서 정몽준 대표 최고위원, 정의화 최고위원, 장광근 사무총장(사진 왼쪽부터)이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내홍 일단 진정 국면

추미애 징계 완화·정동영 설 전 복당 매듭

지방선거 공천·당권싸고 힘겨루기 할수도

정동영 의원의 복당과 추미애 의원의 징계 등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는 듯 했던 민주당의 내홍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당 윤리위원안보다 크게 완화된 수준에서 확정됐고,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도 설 연휴 전에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윤리위는 지난달 추 의원에게 '1년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의 칼을 뽑아들었지만 정작 2일 당무위의 최종 결론은 '2개월 당원자격 정지'로 크게 후퇴했다.

당무위에선 징계수위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지만 정세균 대표가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따라달라"며 '2개월 징계안'을 제안, 상황이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이는 해당 행위에 대한 당의 경고 사인을 분명히 하되 지방선거와 당권 도전의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민심을 외면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고 국민만 보고 일관되게 나가겠다"고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했지만 재심 요청 등 별다른 불복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복당은 이날 당무위에서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해 그 시기가 또다시 미뤄졌지만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전인 내주께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만간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지도부가 당내 현안 해결에 잇따라 나선 것은 비주류 반발을 잠재우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우상호 대변인은 "내부의 복잡한 사안을 정리하고 곧바로 지방선거 채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주류 측에서는 정동영 의원의 복당 지연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지도부도 지난해 재보선 과정에서 정 의원을 지원했던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복해 있다.

여기에다 지방선거 공천과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의 힘겨루기도 갈수록 격화될 수 밖에 없어 민주당의 내홍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하지만 지방선거를 전후해 주류와 비주류의 한 판 대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전국정당 되게 호남서 밀어달라"

어제 광주서 국정보고대회

한나라당은 2일 광주시 북구 한나라당 당사 5층 대강당에서 광주시·전남도당 국정보고 대회를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배출과 두 자릿수 지지율 확보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정의화 최고위원은 "지역갈등을 없애고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전국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에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당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도 "한나라당이 호남에서는 불모지이지만, 호남에도 빛이 스며들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이 기적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재순 최고위원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는 광주·전남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당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 갈등에 대한 해명을 통해 당원들의 단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정문준 대표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인식은 모두 같다"면서 "어려울수록 단결하고 화합하는 한나라당인 만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보고 대회에는 정몽준 대표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재순 최고위원, 박순자 최고위원, 장광근 사무총장,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을 비롯한 김광만 시당 위원장, 김기룡 도당 위원장 등 당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